

두렵다, 채솟값 폭등... 겁난다, 반찬 올리기

메뉴 변경하고 셀프 서비스 없애는 등 광주·전남 자영업자 비명 배추김치 대신 무김치도... "반찬 하나하나 돈 받아야 하나" 울상

"안그래도 고물가에 힘들텐데 채소가격까지 올라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례적으로 긴 폭염과 잦은 비 때문에 작황이 부진해 연일 채소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비싼 채소를 저렴한 채소로 대체하거나 메뉴 자체를 변경하고 '채소 셀프 서비스' 코너를 없애는 등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남구 진월동의 한 샤브샤브 가게에는 아예 채소 손님이 자유롭게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셀프바가 사라졌다.

최근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버려지는 채소를 줄여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조치로 채소를 직접 손님 테이블에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인근의 다른 샤브샤브 가게 주인 박일(36)씨는 "우리 가게는 원래 정량만 드린 건데 옆 가게가 (셀프바를 없앤 것이) 이해가 간다"며 "샤브샤브에 필수로 들어가는 채소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재료를 저렴한 채소류로 바꾸거나 메뉴 자체를 바꾸는 가게도 있다.

남구 진월동의 한 식당에서는 시금치 가격이 폭등하자 잡채에 들어가는 시금치를 저렴한 부추로 대체하기도 했다. 반찬가게에서는 폭등한 배추가격 때문에 메뉴에서 배추김치를 없애고 무김치로 바꿨다.

광주지역 자영업자들은 "채소가격이 평년에 비해 2-5배 가까이 올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더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남구에서 족발집을 하는 박모(42)씨 역시 "버려지는 채소가 아까워 원래 드리던 양보다 조금 줄이고, 원하면 더 갖다드리도록 했다"며 "손님들도 사정을 알다보니 이해해주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아쉬운 소리가 나와 고민이다"고 푸념했다.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김민숙(여·60)씨는 시금치 반찬을 없애야 할 지 고민 중이다.

시금치 1관(3.75kg) 가격이 1만원대에서 4-5만원 수준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찾는 손님이 있어 구색맞추기용으로 계속 만들고 있지만, 시금치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대체할 반찬을 찾아야 할 것 같다. 1개에 5000원인 시금치나물을 팔아봤자 손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쌈채소나 반찬은 '당연히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비싼 채소 가격

채소 가격 폭등에 달린 세대
샤브샤브가게 셀프바 사라지고 반찬가게 잡채 시금치 대신 부추 김밥가게 김밥 판매 포기 고민도

탓에 부담이 커졌다는 호소도 나온다.
동구 불로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훈동(70)씨는 "원래 10박스에 2-3만원이던 상추가 며칠 전 구입할 때 보니 10만원 하더라. 쌈배추는 1만5000원 하던 것이 5만원까지 올랐다"며 "그나마 쌈배추는 품질이 좋지 않길래 빼버렸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산물시장 청과도에 강원도에서 온 고랭지 배추가 쌓여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씨는 "채소가격이 점점 비싸지니 우리나라도 앞으로 일본이나 유럽처럼 반찬 하나하나 돈을 받는 문화로 바뀌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무등시장의 한 김밥집에서 20년 넘게 일했다는 김금순(여·63)씨는 "김밥 판매를 포기하는 가게도 늘었는데 이해가 된다"며 "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랐다. 김 1톤(100장)에 7000원 하던 게 1만3000원까지 두배 가까이 올랐다. 뿐만 아니라 부추, 무, 우엉, 갯잎 등 오르지 않은 게 없다. 김밥을 팔면 팔수록 손해"라고 고개를 저었다.

김씨는 "국밥 한 그릇도 1만원이 넘어가는 추세라 시장 상인들이 새벽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이 저렴한 분식집을 찾고 있지만,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장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걱정이"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에이즈 확진자가 여중생 상대 성매매 광주지검, 40대 남성 구속기소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확진자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후반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경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 B양에게 현금과 담배 등을 주면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적인 A씨는 차량에서 생활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체포당시 A씨가 지니고 있는 약 성분을 추적해 에이즈 확진자임을 확인했다. 수개월 동안 A씨와 B양은 관계를 맺어왔지만 피임기구를 사용해 B양은 에이즈검사에서 음성 나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 이외에 추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여죄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는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7만원 빌려주고 700만원 갚아라

나체사진을 협박 불법 대부업자 실행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채무자를 협박하고 고율의 이자 등을 뜯어낸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에게 실행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23일 광주시 광산구의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선이자 10%(3만원)을 떼고 27만원을 빌려주고 연 330% 이상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0월 피해자에게 이자 일부를 담감하는 조건으로 나체사진을 받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고 온라인에 뿌리겠다"며 이자·연체금으로 7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출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범죄수단으로 악용했고,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제의 판결

45년전 선임 구타로 조현병 걸렸다면?

"제대로 치료 못 받아"...광주고법 1심 뒤집고 "보훈대상" 판결

군대에서 선임들의 구타로 조현병에 걸린 제대 군인을 보훈대상자에서 제외한 광주지방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1980년 육군 포병으로 근무하다 의병전역(依病轉役·질병으로 전역)한 A(67)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978년 입대한 A씨는 "육군 포병대대에서 관측병으로 근무하다 1979년 1월 동계훈련 중 선임들의 구타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조현병이 발생해 악화됐다"면서 2021년 정신분열증을 원인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광주지방보훈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구타에 의한 스트레스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인용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조현병 발병 원인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고 군 의료자료를 보면 A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임영신체검사에서 정신과 '정상' 체격등위 '갑중' 판정을 받았고, 군복무 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면서 "또 1979년 2월부터 사격훈련 이후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첫 진찰이 3개월 뒤인 5월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가족이 '집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했으나 포대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부하고 병원 후송 조치를 약속했지만, A씨가 탈영 시도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야 야전병원으로 옮긴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적절한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도중 조현병이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대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창호(샷시)교체